

헌법집중 선택형 핵심지문총정리(제10판)

추록

P 111 008 해설 대체 (최신판례 반영)

해설 헌법 제10조로부터 도출되는 일반적 인격권에는 각 개인이 그 삶을 사적으로 형성할 수 있는 자율영역에 대한 보장이 포함되어 있음을 감안할 때, 장래 가족의 구성원이 될 태아의 성별 정보에 대한 접근을 국가로부터 방해받지 않을 부모의 권리는 이와 같은 일반적 인격권에 의하여 보호된다. 심판대상조항은 성별을 이유로 한 낙태를 방지함으로써 성비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입법된 것으로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그러나 남아선호사상이 확연히 쇠퇴하고 있고, 심판대상조항이 사문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출생성비가 자연성비의 정상범위 내이므로, 심판대상조항은 더 이상 태아의 성별을 이유로 한 낙태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적합하고 실효성 있는 수단이라고 보기 어렵고, 입법수단으로서도 현저하게 불합리하고 불공정하다. 태아의 생명 보호를 위해 국가가 개입하여 규제해야 할 단계는 성별고지가 아니라 낙태행위인데, 심판대상조항은 낙태로 나아갈 의도가 없는 부모까지 규제하여 기본권을 제한하는 과도한 입법으로 침해의 최소성에 반하고, 법익의 균형성도 상실하였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부모가 태아의 성별 정보에 대한 접근을 방해받지 않을 권리를 침해한다(헌재 2024.2.28. 2022헌마356등). [정답] ○

P 145 051 해설 대체 (대법원 판례 반영)

해설 변호인 및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피의자 등을 조력할 권리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종래 “변호인 자신의 접견교통권은 단지 형사소송법 제34조에 의하여 비로소 보장되는 법률상 권리에 불과하다”고 판시하였으나(헌재 1991.7.8. 89헌마181), 이후 “변호인의 조력권 중 변호인의 변호권은 헌법상 기본권으로서 보호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고(헌재 2003.3.27. 2000헌마474; 2017.11.30. 2016헌마503), 최근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접견교통권은 헌법상 기본권으로서 보장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헌재 2019.2.28. 2015헌마1204). 한편 대법원은 “미결수용자가 가지는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은 그와 표리 관계인 변호인(변호인이 되려고 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접견교통권과 함께 헌법상 기본권으로 보장되고 있다(헌법재판소 2017.11.30. 2016헌마503 결정, 헌법재판소 2019.2.28. 2015헌마1204 결정 등 참조)”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22.6.30. 2021도244).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변호인의 구속피의자·피고인에 대한 접견교통권도 헌법상 기본권으로 보장되므로 틀린 지문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정답] ×

P 238 010 정답 수정

[정답] ○ ⇨ [정답] ×